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 “경제적 사정 따라 벌금액 선정”

사법·법무개혁 위한 당정협의

‘재산비례벌금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조국 법무장관, 모두발언서 “가족 수사 때문에 오해

검찰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검찰 수사 이후에 시행”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입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종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미려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

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

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뉴스

‘장애인 고용 선택 아닌 필수’

송성환 도의회 의장,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열고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제고 위해 공동 대응키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18일 장애인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김영근 지사장과 전주맞춤형센터 이성화 센터장,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성래 센터장이 참석,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시군 거주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광역이동 지원 서비스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24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성환 의장은 “도와 출연기관, 도교육청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준수와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고용 이행실적 반영 등 도와 협의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증장애인 광역이동 지원과 관련 “전북도와 협의해 시군 수요조사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장애인 기관·단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가져 이동지원 서비스 및 과전환장 운영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조달시 해당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한 축인 만큼 전라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행자위, 임실동부권 사업 현장 점검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현황 청취 등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18일, 임실군에서 동부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성중인 여러 사업장을 둘러보며 진행상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전북도 및 임실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 식품·관광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동부권사업 범위를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동부권 발전사업은 낙후된 동부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



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오늘 방문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동부권 발전사업의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임실군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옥정호 및 섬진강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 연계사업으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로 2020년까지 총 280억이 투입되어 완공될 예정이며, 임실군에서는 식품분야의 치즈식품클러스터와 함께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 중에 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서예문화 발전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서예문화 발전과 서예를 통한 도



김기영 도의원 조례안 발의

민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전북은 강안서예관이 있고 세계서예비엔날레가 해마다 개최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서예문

화의 중심지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서예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께서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인 서예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8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돼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고민형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